

토론문 : 광복100년, 민주공화적 국가의 비전을 탐색하며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1. 발표문 재정리

1)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어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은 상시적 ‘위기 공화국’이었다. 지난 80년간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에는 (1)미.소의 군사적 점령과 38도선 획정과 분단, (2)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3)한국전쟁과 대규모 (4)학살, (5)이승만정권의 독재화, (6)5.16군사쿠데타, (7)군사독재의 장기화(3선개헌과 유신헌법), (8)군사독재의 재생산(12.12쿠데타와 5.18 광주학살), (9)양김 분열과 군사정권의 재창출, (10)3당합당, (11)IMF, (12)노무현대통령 탄핵, (13)한반도대운하, (14)북핵 개발, (15)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나? 발표자는 이것을 민주화 이후 우리 공동체 내부의 격화된 갈등과 대립으로 정의한 후 이 위기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발표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민주적 전투성이 민주화 이후에는 선악 이분법 논리, 상대에 대한 악마화, 상대에 대한 부정 등 전투성의 유산으로 남아 정치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민주화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이 내로남불이 되어 이분법

과 결합되어 자발적 극우를 양산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역사적 극우가 최근의 자발적 극우와 결합하여 진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등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우 집권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3)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화 세대로서 민주주의를 체득한 발표자는 그간 우리가 소홀하게 다루었던 공화주의의 이념과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발표자는 우리 역사에서 진보는 자유민주적 진보 → 변혁적·혁명적 진보 → 민주개혁적 진보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이른바 ‘민주화의 그늘’이 발생하고, 이것을 자양분 삼아 극우가 발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주주의 진보를 공화적 진보(민주공화적 진보) 혹은 글로벌 진보로 확장하여 진보가 공화성과 공동체성을 체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전환에는 민주투쟁적인 이니셔티브를 공화적 이니셔티브로 바꾸고 상대와의 타협과 공존의 여지를 품는 3:7제 민주주의 등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발표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에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안한다.

4) 공화주의적 접근의 확장

발표자는 오랜 교육운동의 경험과 현장 교육감 직무의 경험을 이러한 문제의식에 녹여내어 최근 강조되는 민주시민교육 역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여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전제로 우리 교육이 역지사지형 토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을 광복 100년 운동과 연계하여 지구촌화, 양극화와 극단화, AI혁명,

기후위기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화적 세계생태시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 몇 가지 재검토 논점

발표자의 가장 큰 덕목은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특별하게 발휘되는 뚜렷한 자기성찰성과 매우 폭넓은 이념적 포용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의 발표문에도 이러한 장점이 풍부하게 녹아들어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오늘의 발표는 상당한 학문적 성찰과 실천적 재구성의 효과를 제공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발표자의 문제의식이 더욱 확장되고 충분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주마가편의 차원에서 몇 가지 재검토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위기 규정이나 위기의 성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기의 원인을 민주화운동 내부, 민주화운동의 전투성에 맞추는 것의 적실성 문제

우리는 80~9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민주화를 기반으로 권력이 민주적으로 교체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화가 목표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권력이 목표가 되었고 정책은 집권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이 위기라면 그 위기는 민주화운동의 전투성 때문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방향 상실과 목표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다. 즉,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회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가 광복 100년, 해방 100년의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이 화두를 발전시켜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2) 민주화 이후 세대가 확산되는 시대에 이들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살 이하의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의 세대에 속하며, 이들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가 이념적 디폴트가 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더해서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화장실 비데, 코스피 지수, 암호화폐 거래 등도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그 자산적 효과를 불안하게 하는 세력은 나쁜 편이 된다. 이들에게 민주화 세대는 권력집단 혹은 기득권집단으로 보인다. 발표자가 강조하는 ‘성공의 위기’란 민주화의 성공으로 혜택을 입은 세대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민주주의가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내로남불이 가장 적합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극우가 아니라, 우리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세력일 수도 있다.

3) 민주화에서 포스트 민주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극우 발호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우리 사회는 다층적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민주화, 남북관계, AI혁명, 노동관계, 전통 모두가 전환적 상황이다. 전환기는 무질서와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전환기 혹은 과도기 상황의 일반화는 무리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의 3/4에 해당하는 60년간 극우반공체제였고 초기 40년이 내리 극우체제, 그중 33년이 군사독재였다. 그 후 정권이 교대되고 있지만 보수정권은 극우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발표자가 거론한 유럽 극우의 등장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오랫동안 극우 체제에 있었고 지금도 극우와 공존 공생하고 있는 셈이다.

3. 토론자 보충 의견

앞의 재검토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발표자의 문제의식과 의견에 넉넉히 동의하며 그 필요성과 순기능적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 다만, 발표자가 제안한 전환적 사고와 3:7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대안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상호협력적인 다른 대안적 사고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화 세대의 성찰에 당연히 동의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보수의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전략의 수립을 제안한다. 닭이 알을 깨는 줄탁동시의 원리는 정치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진보와 보수와 다양한 중도가 100% 각축하는 정상적인 정치사회적 구조의 형성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토끼를 잡은 것은 자타공인의 사실이지만, 보수가 보수답지 않고 진보가 지리멸렬한 기형적인 토끼를 잡은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도의 창조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제를 계속할 것인지, 언제까지 분권없는 자치를 고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주권의 기본인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투표, 국민소환 모두 불완전한 상황인 만큼 즉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넷째>, 분단 상황에서 민주화는 그 자체가 완결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만큼 해방 100년, 광복 100년을 향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화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